

북한 경제개혁의 초기 조건 : 국제비교적 시각

김석진(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1990년대 북한의 체제위기가 뚜렷해진 이후, 국내외에서는 북한 체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가 활발하게 토론되어 왔다. 북한 체제는 붕괴할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만약 붕괴한다면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체제가 유지될 경우 북한은 시장지향적 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체제를 고수할 것인가? 북한이 스스로 개혁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떤 전략 또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기존의 문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주로 북한의 경제개혁 또는 체제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체제전환 일반에 대해 제기된 이슈, 즉 빅

뱅식 또는 급진적 개혁전략과 점진주의적 개혁전략 간의 선택 문제가 강조되었다. 또는 소련·동유럽식 개혁인가 중국·베트남식 개혁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북한 경제의 객관적 조건을 검토하는 작업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¹⁾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체제전환을 둘러싼 세계 경제학계의 토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 10년 내지 20여 년에 걸친 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은 경제개혁의 성과가 체제전환국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낸 반면, 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또한,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보다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의 경제난이 훨씬 더 심각하였다. 경제개혁의 성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1990년대 초·중반의 토론에서는 어떤 개혁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고, 개혁전략의 선택이 곧 경제성과를 좌우하는 중심적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혁 개시 당시의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이 개혁 전략의 선택 못지 않은,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연구가 꽤 나오고 있다.²⁾ 이들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과 관련하여 향

1) 북한의 경제개혁 내지 체제전환의 전망에 관한 기준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7~11쪽 참조.

2) Martha De Melo, Cevdet Denizer, Alan Gelb and Stoyan Tenev, “Circumstance and Choice :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king Paper(World Bank, Oct. 1997) ; Gary Krueger and Marek Ciolko, “A Note on Initial Conditions and Liberalization during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No. 4(1998) ; Andrew Berg, Eduardo Borensztein, Raena Sahay and Jeromin Zettelmeyer, “The Evolution of Output in Transition Economies : Explaining the Differences”, Working Paper, 99/73(IMF,

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분석틀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혁 정책의 선택과 실행 및 그 유효성 자체가 초기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따라서 초기 조건에 대한 검토는 경제개혁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 이후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기 조건들은 무엇인가?⁴⁾ 그것들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연구자마다 초기 조건의 지표들을 달리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정교하며 체계적인 논의를 제출한 것은 드 멜로(Martha De Melo) 등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이다.⁵⁾ 소련,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인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이들의 연구를 채택하여 초기 조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바 있다.⁶⁾

1999); Vladimir Popo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17, No. 1(2000);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he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Working Paper 7664(NBER, 2000); Elisabetta Falcetti, Martin Raiser and Peter Sanfey, "Defying the Odds: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Working Paper, No. 55(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0).

- 3) 초기 조건과 개혁정책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며, 국가에 따라 그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초기 조건의 중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개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 간다고 할 수 있다. De Melo et al., "Circumstance and Choice"; Falcetti et al., "Defying the Odds" 참조.
- 4) 이 논문에서 "경제개혁의 초기 조건이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것은 초기 조건과 개혁 이후 성장을('경제성과')간의 상관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지, 초기 조건과 개혁 이후 경제발전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개혁 이후 경제성과가 러시아·동유럽보다 훨씬 좋았으나 여전히 러시아·동유럽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은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지, 더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5) De Melo et al., "Circumstance and Choice".

6) EBRD, *Transition Report 1999*(London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또한 분석결과를 보아도 이들의 연구가 다른 연구보다 체제전환국간의 초기 조건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논의에 따라 초기 조건의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도 중국·베트남과 북한을 비교한 연구 및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한 연구⁷⁾에서 초기 조건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다른 체제전환국과 비교할 때 북한의 초기 조건이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더 엄밀한 분석틀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초기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개혁 및 성장 전망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정치적·국제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북한 체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개혁전략의 선택에 관한 문제는 피하고, 단지 경제적 조건에만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2. 초기 조건과 경제개혁의 성과

드 멜로(Martha De Melo) 등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은 경제개혁 또

1999), pp. 26~30 ; Falcetti et al., "Defying the Odds".

7) 정여천,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 방향』(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참조.

는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되는 11개의 지표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1인당 소득(PPP 기준 1인당 GDP), 도시화율, 산업 왜곡도, 자연자원 부존도, 자리적 위치, 최근의 성장실적 등 6개의 지표가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간다. 두 번째 그룹은 인플레 압력,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사회주의권에 대한 무역의존도, 국가역량, 계획경제 존속기간 등 5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첫 번째 그룹 중 네 가지 지표는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먼저,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개혁 이후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국일수록 “따라잡기(catch up)”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성장론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확립된 정설이기도 하다. 도시화율도 역시 낮을수록 개혁의 성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경제개혁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내기 때문이다. 산업왜곡도는 GDP 중 실제의 공업비율과 1인당 소득수준 및 인구규모로부터 예측 가능한 공업비율 사이의 격차로 정의된다.⁸⁾ 사회주의 경제는 공업의 과잉성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즉 공업화가 진전되어 있을수록 산업왜곡도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낮은 쪽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최근 성장실적은 경제개혁 개시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로 정의되며,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것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는 초기에는 요소투입 증대에 의한 외연적 성장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실적을 보이지만 후기에는 내포적 성장에 실패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

8) 여기에서 말하는 ‘공업(industry)’은 광업, 제조업, 건설, 전기·가스·수도업(utilsities)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이다. 1인당 소득수준과 인구규모에 따른 공업비율의 ‘예측’은 시르קין과 체너리가 국가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해낸 회귀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Moshe Syrquin and Hollis B. Chenery, “Patterns of Development, 1950 to 1983”, Discussion Papers, No. 41(World Bank, 1989) 참조.

하는 보편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성장실적이 높은 국가일수록 발전의 잠재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의 지표들 중 나머지 두 가지는 자연·지리적 여건을 반영한다. 먼저, 자연자원 부존도는 “풍부”, “중간”, “부족”의 3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좀더 쉽게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생긴다. 거꾸로 자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간 무역협의체인 상호경제원조회의(CMEA)의 해체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해 에너지 수입이 감소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점에서는 자연자원이 풍부할수록 개혁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자연자원이 풍부할 경우 제조업부문 개발 노력이 약해지거나, 자연자원을 둘러싼 이익집단의 형성과 이들에 의한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가 개혁과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⁹⁾ 이 점까지 고려할 경우 자연자원의 역할은 분명치 않다.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 국가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운 경우와 먼 경우, 두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까운 국가에는 1을 부여하고 먼 국가에는 0을 부여한다.¹⁰⁾ 중국, 베트남, 동유럽이 가까운 쪽에 속한다면 구 소련 출신의 여러 국가들은 먼 쪽에 속한다. 시장경제 국가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은데, 그 이유는 지리적 인접성이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인접국들인 홍콩, 대

9) 자연자원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Jeffrey D. Sachs and Andrew M. Warner,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5398(NBER, 1995)을 참조.

10) 지리적 위치를 단지 0과 1 두 그룹으로만 분류한 것은, 이 지표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해 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드 멜로 등의 분석결과를 보면, 두 그룹으로만 분류해도 주성분 접수와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분석에 큰 지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만,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의 무역·투자 관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반면,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은 서유럽이나 아시아 경제 중심지와의 거리가 멀어 무역 확대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 그룹은 대체로 사회주의 시기에 축적된 거시경제적 왜곡 및 제도적 왜곡을 반영한다. 먼저 인플레 압력(또는 억제된 인플레이션, repressed inflation)은 경제개혁 개시 직전 3년간의 실질임금(deflated wage) 상승률과 실질 GNP 성장률 간의 격차로 정의된다. 이 격차는 ‘통화과잉(monetary overhang)’의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¹¹⁾ 즉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높아 그 격차만큼 실질임금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실질 GNP의 성장이 그에 못 미쳤다면 여분의 화폐는 과잉통화가 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돈이 있어도 국영상업망으로 공급되는 물품이 부족하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통화는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여 암시장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며, 경제개혁으로 가격 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플레 압력이 높을수록 경제개혁에 불리하다.

두 번째 지표인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도 역시 과잉통화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첫 번째 지표가 최근 3년간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더 커졌는가를 보여 주는 데 비해 두 번째 지표는 그 이전까지 포함하여 이제까지 축적된 인플레 압력의 총효과를

1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드 멜로 등이 설정한 지표는 ‘통화과잉’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증가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큰 규모의 통화과잉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것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개혁과 함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와 달리 만약 개혁 직전에 통화과잉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개혁 초기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물가상승은 나타나더라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 구 소련과 동유럽 사이에서 개혁 직후 인플레이션 양상이 크게 달랐던 점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반영한다. 이상의 두 지표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권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평균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은 관료적·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된 경제활동으로, 개혁 실시와 함께 대폭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제난을 야기하게 된다.¹²⁾ 따라서 사회주의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개혁 이후 경제성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계획경제 존속 기간도 길수록 개혁에 불리하다. 계획경제 존속기간이 긴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가역량은 세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구 소련 출신의 신생 국가들은 0, 구 소련의 중심국이었던 러시아는 1, 개혁 개시 전후에 변함 없이 독립국가들이었던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2로 정의한다. 이 지표를 따로 설정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의 결과 발생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새로운 민족국가(nation-state) 형성에 따른 어려움이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의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동유럽에 비해 구 소련의 개혁이 어려웠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즉,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은 연방 해체와 분리 독립의 혼란 속에서 국가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이것이 개혁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저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11개의 초기 조건 지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그 자체로는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간단히 축약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적합한 통계적 분석기법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이다. 주성분 분석이란 해석하고자 하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거기에 포함된 정보의 손실을 가능한 한 적게 하면서 2차원 혹은 3차원의 데이

12)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Jan Winiecki, “Solving Foreign Trade Puzzles in Post-Communist Transition”, *Past-Communist Economies*, Vol. 12, No. 3(2000) 참조.

터로 축약하는 방법이다.¹³⁾

드 멜로 등은 중국, 베트남을 포함하는 28개 체제전환국의 경우에 대해 이들 11개 지표를 수집·정리한 다음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초기 조건의 지표를 두 차원으로 축약하였다. 그 결과 “주성분 - 1”의 점수는 두 번째 그룹의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강하고, “주성분 - 2”的 점수는 주로 첫 번째 그룹의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즉 주성분 - 1은 거시경제적 및 제도적 왜곡을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주성분 - 2는 발전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성분 점수가 낮을수록 초기 조건이 개혁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차원으로 요약되는 초기 조건이 개혁정책의 선택 및 집행 능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경제개혁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개혁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의 역동성이 발휘되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과거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기존의 경제활동 중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조건이 불리한 국가(거시경제적, 제도적 왜곡이 심한 국가)에서는 급속한 개혁이 단기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정부는 초기에 개혁을 천천히 진행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성분 - 1은 개혁속도와 (-)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주성분 - 2는 산업왜곡도를 반영하는 한에서는 앞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개혁 속도와 (-)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 노형진,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서울 : 형설출판사, 2001), 457 ~476쪽 참조.

14) 단, 첫 번째 그룹 중 지리적 위치는 주성분 - 1 점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주성분 - 2는 왜곡보다는 발전수준을 더 많이 반영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자유화가 더 진전되어 있고, 따라서 또한 개혁이 더 급속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전수준, 즉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개혁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개혁을 성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 역량 역시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잘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성분 - 2 점수가 높을수록 개혁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요컨대 주성분 - 1과 주성분 - 2는 개혁정책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성분 - 1의 점수는 낮고 주성분 - 2의 점수는 높으면 급진적 경제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개혁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추론은 주로 경제적 조건에만 근거한 것으로, 정치·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에 넣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북한의 초기 조건

이제 드 멜로 등이 분석한 28개 체제전환국에 북한을 추가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할 경우 북한의 위치가 체제전환국들 중 어느 쪽에 가깝게 되는가를 검토해 보자. 또, 주성분 분석의 결과와 체제전환국의 실제 경험이 앞에서 논의한 초기 조건, 개혁정책, 경제성과 간의 상관관계와 잘 들어맞는지도 살펴보자. 그리고 1989/90년 무렵의 북한과 2001/02년 현재의 북한을 마치 별개의 국가인 것처럼 취급하여 지난 10여 년 사이

에 북한의 초기 조건이 어느 만큼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이 논문에서는 드 멜로 등이 정리한 11개 초기 조건 지표 가운데서 자연자원 부존도와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을 제외한 9개 지표만으로 주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¹⁵⁾ <표 1>과 <표 2>는 이 9개 지표에 대해 28개 체제전환국과 1989/90년 및 2001/02년의 북한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표는 드 멜로 등이 정리한 자료이지만¹⁶⁾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1990년 1인당 PPP 기준 GDP는 피셔와 사헤이의 자료¹⁷⁾로 대체하였다. 체제전환국의 자료 부족으로 PPP 기준 GDP의 계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피셔와 사헤이는 자료를 보충하여 계산을 수정한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15) 본래 자연자원 부존도가 개혁정책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며, 북한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자연자원 부존도는 주성분 점수와 별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인플레 압력과 거의 동일한 경제적 내용을 가리키는 지표로서 28개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그런데 1990년대에 체제전환의 길로 들어선 대부분의 구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서는 기존 체제가 고수되는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이 현실화되어 벌렸으며, 최근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드 멜로 등이 정의한 의미의 “억제된 인플레이션”, 즉 최근 3년간 추가된 인플레 압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표 4> 및 이와 관련된 본문의 설명 참조. 반면 과거 시기에 누적된 인플레이션의 총효과로서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1990년대 동안 큰 폭으로 치솟았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을 포함시킬 경우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흐트러져 주성분 분석에서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이라는 변수가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국정가격이 이미 의미를 잃고 대다수 물품이 농민시장(‘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근 북한의 상황에서는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2002년 7월 이후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가격 및 임금 현실화를 실행하였는데 그 효과는 아직 분명치 않으므로 이 글의 고려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16) 드 멜로 등의 자료 중, 중국의 계획경제 존속기간(계획경제 수립으로부터 시장지향적 개혁 개시까지의 기간)은 1946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誤記)로 판단되므로 1929년(1949 ~ 1978)으로 수정하였다. De Melo et al., “Circumstance and Choice” 참조.

17) Fischer and Sahay, “The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p. 36.

〈표 1〉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초기 조건 지표 : 그룹 - 1

	1인당 GDP (PPP 기준)	도시화율 (%)	산업 왜곡도 (%)	지리적 위치	최근 성장률 (%)
아르메니아	2,453	68	20	0	2.7
아제르바이잔	2,466	54	8	0	0.8
벨로루시	6,667	66	12	0	5.2
에스토니아	6,475	72	10	1	2.7
그루지아	2,203	56	8	0	2.4
카자흐스탄	4,133	57	-4	0	4.3
키르기즈스탄	2,770	38	6	0	5.2
라트비아	5,204	71	10	1	3.5
리투아니아	3,603	68	10	1	2.9
몰도바	3,562	47	2	0	5.7
러시아	5,627	74	7	1	3.2
타지키스탄	1,778	32	0	0	1.9
투르크메니스탄	3,308	45	-1	0	5.0
우크라이나	4,658	67	4	0	2.4
우즈베키스탄	2,577	41	-4	0	3.9
알바니아	629	37	3	1	3.6
불가리아	5,740	68	23	0	2.7
크로아티아	6,919	62	1	1	0.2
체크	8,207	65	21	1	1.6
헝가리	6,081	62	-1	1	1.6
마케도니아	3,720	59	9	0	0.2
폴란드	5,687	62	13	1	2.8
루마니아	3,535	53	22	0	-0.8
슬로바크	6,969	57	23	1	1.6
슬로베니아	11,525	62	5	1	-0.4
중국 (1978)	800	18	3	1	9.0
몽고	2,100	60	1	0	5.4
베트남 (1986)	1,100	19	-7	1	5.0
북한 (1989/90)	1,963	60	6	1	1.4
북한 (2001/02)	1,108	60	8	1	0.7

출처 : 북한 자료에 대해서는 본문의 설명 참조. 나머지 국가의 경우 1인당 PPP GDP는 Fischer and Sahay, "The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p. 36; 나머지 지표는 De Melo et al. "Circumstance and Choice", p. 55 참조.

〈표 2〉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초기 조건 지표 : 그룹 - 2

	의제된 인플레이션 (%)	CMEA 무역의존도 (%)	국가 역량	계획경제 존속기간 (년)
아르메니아	25.7	25.6	0	71
아제르바이잔	25.7	29.8	0	70
벨로루시	25.7	41.0	0	72
에스토니아	25.7	30.2	0	51
그루지아	25.7	24.8	0	70
카자흐스탄	25.7	20.8	0	71
키르기즈스탄	25.7	27.7	0	71
라트비아	25.7	36.7	0	51
리투아니아	25.7	40.9	0	51
몰도바	25.7	28.9	0	51
러시아	25.7	11.1	1	74
타지크스탄	25.7	31.0	0	71
투르크메니스탄	25.7	33.0	0	71
우크라이나	25.7	23.8	0	74
우즈베키스탄	25.7	25.5	0	71
알바니아	4.3	6.6	2	47
불가리아	18.0	16.1	2	43
크로아티아	12.0	6.0	1	46
체크	-7.1	6.0	1	42
헝가리	-7.7	13.7	2	42
마케도니아	12.0	6.0	1	47
폴란드	13.6	8.4	2	41
루마니아	16.8	3.7	2	42
슬로바크	-7.1	6.0	0	42
슬로베니아	12.0	4.0	1	46
중국 (1978)	2.3	1.0	2	29
몽고	7.6	31.0	2	70
베트남 (1986)	15.0	7.2	2	21
북한 (1989/90)	40.0	5.0	2	44
북한 (2001/02)	0.0	0.0	2	56

출처 : 북한 자료에 대해서는 본문 설명 참조. 나머지 국가는 De Melo et al., "Circumstance and Choice", p. 59 참조.

그밖의 지표들도 자료 부족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추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기 조건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초기 조건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첫째, 1인당 PPP GDP는 1990년에 남한의 1인당 PPP GDP의 1/4, 2001/02년의 경우 1/12.7(한국은행의 2000년 추정치 적용)로 가정하였다.¹⁸⁾ 그 경우 북한의 1인당 PPP GDP는 1990년에 1,963 달러, 2000년에 1,369 달러가 된다.¹⁹⁾ 그리고 2000년의 수치를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²⁰⁾를 이용하여 1990년 불변 달러로 바꾸면, 1,108달러가 된다. 즉 1990년대 경제난의 결과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크게 퇴보하였다.

둘째, 1987년 현재 60%였던 도시화율²¹⁾은 1990년과 2001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북한의 도시화율은 1980년에 57%에 도달한 후 상승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1990년대에도 도시화율이 뚜렷이 상승 할 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산업왜곡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우선 1992년 현재 GDP 중 공업비율이 44%라는 북한 당국의 발표(<표 3>)를 참고하여 1989/90년에도 역시 44%라고 가정하였고 2001/2002년에는 다소 하락해 40%가 되었다고 가정했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에 공업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으나(<표 3>), 이는 1990년대 초의 서비스 비율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농업생산 하락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생각된다.²²⁾

18) 이 가정에 대해서는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 2장의 부록 참조.

19) 남한의 1인당 PPP GDP에 대해서는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Network Growth Database”(<http://www.worldbank.org/research/growth/GDNdata.htm>) 참조.

20) 미국 상무부 자료(<http://www.bea.doc.gov/bea/dn>) 참조.

21)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3장 <표 3-8> 참조.

22) 농업생산 하락의 과소평가에 대해서는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6장 2절 참조.

그 다음, 드 멜로 등이 사용한 방법대로 시르퀸과 체너리의 국가간 회귀방정식²³⁾을 이용하여 정상적인(또는 ‘예측된’) 공업비율을 추정해 보면, 1989년의 정상적 공업비율은 38%, 2001/02년은 32%로 나타난다.²⁴⁾ 산업왜곡도는 실제 공업비율에서 정상적 공업비율을 차감한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산업왜곡도는 1989년에 6%, 2001/02년에 8%가 된다. 산업왜곡도도 지난 10여 년간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표 3〉 북한의 산업구조 : GDP의 산업별 구성비율(%)

	북한 발표치			한국은행 추정치		
	농업	공업	서비스	농림어업	공업	서비스
1991	-	-	-	28.0	51.2	20.9
1992	21.8	43.8	34.4	28.5	48.0	23.5
1993	22.4	45.3	32.3	27.9	46.2	25.9
1994	20.9	47.6	31.5	29.5	42.5	27.9
1995	17.4	47.2	35.4	27.6	42.0	30.3
1996	14.7	49.9	35.4	29.0	38.7	32.3
1997	-	-	-	28.9	36.1	35.0
1998	-	-	-	29.6	34.9	35.6
1999	-	-	-	31.4	36.2	32.4
2000	-	-	-	30.4	37.1	32.5

출처: 북한 발표치는 UNDP(1998),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http://undp-dprk.apdip.net>), Annex 10; 한국은행 추정치는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년도 참조.

23) Syrquin and Chenery, “Patterns of Development, 1950 to 1983”, p. 102.

24) 시르퀸과 체너리의 회귀식은 1980년 불변 달러 기준 1인당 GDP와 총인구를 변수로 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989/90년 및 2000/2001년 북한의 1인당 GDP를 1980년 불변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2장의 추정결과 및 통일부/한국은행의 추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1989/9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1,000~1,300달러, 2000/2001년 1인당 GDP는 700~800달러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1980년 불변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1989/90년은 대략 700~900달러, 2000/2001년은 370~430달러가 된다. 이를 시르퀸과 체너리의 회귀식에 대입하면, 정상적 공업비율이 얻어진다.

넷째,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 국가와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1, 멀면 0의 숫자를 부여한다. 북한은 남한,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으므로 1을 부여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성장률은 개혁 개시 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다. 이 논문에서는 1985~1989년 성장률은 필자가 새로 추정한 북한 성장을 시계열 중 “새 추정치 - 3”²⁵⁾을 적용하고 1997~2001년 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치²⁶⁾를 적용하였다.

여섯째, 북한의 경우 억제된 인플레이션은 자료 부족 때문에 드 멜로 등이 제시한 방법대로 측정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1989~1994년 평균 북한의 과잉통화규모가 실제 통화량의 40% 수준이었다는 한국은행의 추정 결과²⁷⁾를 이용하여 1989/90년 북한에 대해 이 지표의 수치를 40%로 가정하였다. 다른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 수치가 25.7%로 가장 높았던 구 소련 출신의 국가들은 개혁 개시 초기 수천% 수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반면, 이 수치가 낮았던 체코, 헝가리, 슬로바크 등은 개혁 개시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수십%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1990년대 북한의 물가상승률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공식 시스템이 상당 부분 해체되면서 농민시장이 국영 상업망을 대체하고 농민시장 가격이 국정 가격에 비해 수천% 상승하였다(표 4)).

이에 비추어 볼 때 1989/90년 현재 억제된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판단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²⁸⁾ 1990년대 초·중반 빠른 속

25)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20~41쪽 참조.

26)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참조.

27) 이원기·이대원,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시산”(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8-10, 1998).

28) 드 멜로 등이 제시한 “억제된 인플레이션” 지표는 “통화과잉”的 절대적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속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북한의 경우 1989/90년의 경우에는 절대적 규모에 대한 평가를 인용해 지표를 구성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 시기

〈표 4〉 1990년대 북한의 소비자 물가 동향

	1990 국정가격	1998 농민시장가격	2001 농민시장가격
쌀(1kg)	8전	15~20원	77원
돼지고기(1kg)	7원	20~40원	181원
달걀(1개)	1원 70전	2~3원	16원
소주(1병)	2원 40전	20원	-
맥주(1병)	92전	-	78원
			35원

출처 : 1990년은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지표집」(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6), 191쪽 ; 1998년과 2001년은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 5쪽.

도로 진행된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대체로 진정되었다고 한다.²⁹⁾ 과거의 인플레 압력은 1990년대 초·중반에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2001/02년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1/02년 현재(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전 시점)의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된 인플레이션 지표를 0%로 가정하였다.

일곱 번째, CMEA 무역의존도는 대(對) CMEA 국가 수출입의 평균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1990년 대 소련 및 대동유럽 수출입액은 25억 달러 정도이며,³⁰⁾ GDP는 필자의 새 추정치에 의하면 282억 달러,³¹⁾ 한국은행 추정치로는 231억 달러이다.³²⁾ 따라서 CMEA 무역의존도는 대략 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000/

에 그 증가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29)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통일부, 2001. 12) 참조.

30) 북한의 무역액은 통계마다 다소 다르다. 여기에서는 1990년의 총수출액이 17억 3,000만 달러, 수입액이 24억 4,000만 달러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2001), 11쪽)와 대 소련 및 대 동 유럽 수출비중이 63%, 수입비중이 60%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지표집』, 151, 153쪽)를 이용하였다.

31)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2장 3절 및 〈표 2-14〉 참조.

32)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서울 : 통계청, 2000), 75쪽.

2001년에는 더 이상 CMEA 또는 사회주의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비율을 0%로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국가역량은 개혁 개시와 함께 새로 독립한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은 0, 구 소련의 중심이었던 러시아는 1,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하여 성립한 신생 국가들도 1, 나머지 국가들은 2이다. 북한은 2에 속한다. 즉 북한의 경우, 구 소련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국가 자체의 분열과 새로운 분리된 여러 국가의 형성 같은 현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가역량 지표가 러시아보다 높은 2라는 것은 북한이 현재의 러시아보다 국가의 행정적 통치능력이 반드시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의 개혁 초기에 발생했던 특수한 장애요인이 북한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 번째, 계획경제 존속기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성립한 해로부터 경제개혁 개시 연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북한의 경우 1946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1990년까지는 44년, 2002년까지는 56년이 된다.

〈표 1〉과 〈표 2〉에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조건 지표와 주성분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면, 주성분 - 1은 초기 조건 중 주로 그룹 - 2의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높고, 주성분 - 2는 그룹 - 1의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5〉 참조). 단, 그룹 - 1의 지표 중 지리적 위치는 주성분 - 1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 결과는 드 멜로 등이 북한을 제외한 28개 체제전환국에 대해 실시한 주성분 분석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주성분 - 1은 전체 변동요인의 37%를 설명하고 주성분 - 2는 26%를 설명하여, 2개의 주성분 점수가 전체 변동요인 중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조건 지표와 주성분 점수 간의 상관계수와 앞에서 논의한 초기

조건 지표의 정의를 종합해 생각해 보면, 주성분 점수는 주성분 - 1이든 주성분 - 2이든 낮을수록 초기 조건이 개혁에 유리하고 높을수록 개혁에 불리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대로 주성분 - 1의 점수가 낮고 주성분 - 2의 점수가 높으면 급진적 경제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5〉 초기 조건 지표와 주성분 점수 간의 상관계수

	주성분-1	주성분-2
소득수준	-0.264	0.739
도시화	0.024	0.891
(과잉)산업화	-0.250	0.644
최근 성장률	0.327	-0.648
지리적 위치	-0.728	0.021
인플레 압력	0.746	0.053
CMEA 무역의존도	0.860	0.125
국가 역량	-0.762	-0.318
계획경제 존속기간	0.836	0.206

출처 :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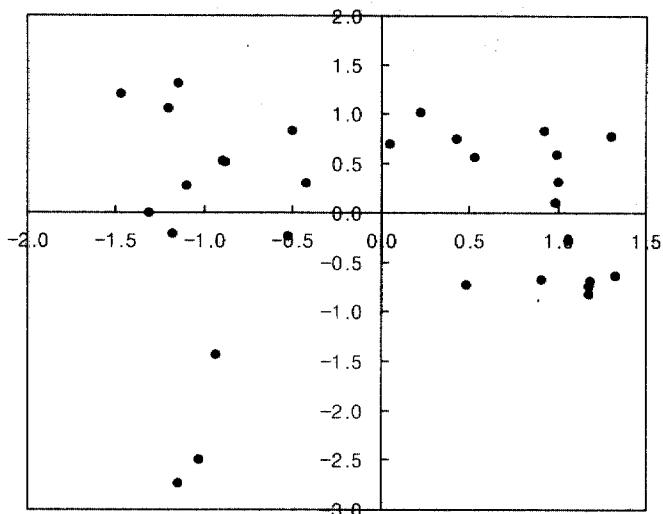
체제전환국의 초기 조건을 요약하는 두 개의 주성분 점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주성분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를 2차원 그래프 위에 나타내 보자(〈그림 1〉). 가로축은 주성분 - 1, 세로축은 주성분 - 2이다. 이를 보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구 소련 출신 국가들 중 비교적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1사분면에, 비교적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4사분면에 위치하고,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사분면에 위치하며, 3사분면의 좌하귀에 위치한 점이 중국, 그 바로 위에 있는 점이 베트남이다. 이상의 결과는 드 멜로 등의 분석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다. 북한은 3사분면 중 가로축 가까이에 있

〈표 6〉 체제전환국 국가별 초기 조건 주성분 점수

	주성분-1	주성분-2
아르메니아	0.92	0.83
아제르바이잔	1.00	0.32
벨로루시	1.30	0.78
에스토니아	0.22	1.02
그루지야	0.99	0.11
카자흐스탄	1.06	-0.28
키르기즈스탄	1.18	-0.70
라트비아	0.43	0.76
리투아니아	0.53	0.57
몰도바	0.91	-0.68
러시아	0.05	0.71
타지키스탄	1.18	-0.74
투르크메니스탄	1.33	-0.64
우크라이나	1.00	0.59
우즈베키스탄	1.18	-0.82
일반나아	-0.94	-1.44
불가리아	-0.50	0.83
크로아티아	-0.90	0.53
체크	-1.47	1.21
헝가리	-1.32	0.01
마케도니아	-0.43	0.31
폴란드	-1.10	0.28
루마니아	-0.88	0.52
슬로바코	-1.21	1.06
슬로베니아	-1.15	1.31
중국 (1978)	-1.15	-2.74
몽고	0.49	-0.73
베트남 (1986)	-1.03	-2.49
북한 (1989/90)	-0.52	-0.24
북한 (2001/02)	-1.18	-0.22

출처 : 필자 계산. 본문 설명 참조.

(그림 1) 주성분 점수로 나타낸 체제전환국 국가별 초기 조건



출처 : (표 6) 참조.

는 두 점이다. 두 점 중 훨씬 왼쪽에 위치한 점이 2001/02년의 북한, 오른쪽에 위치한 점이 1989/90년의 북한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주성분 점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조건이다. 즉 주성분 점수가 낮을수록 개혁 이후 경제성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의 초기 조건이 가장 나쁘고 3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의 초기 조건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또 1사분면에서 3사분면으로 대각선으로 내려갈수록 경제성과가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소련보다는 동유럽, 동유럽보다는 중국 및 베트남의 초기 조건이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체제전환국의 실제 개혁 경험과 대체로 일치한다. 현실에서도 구 소련보다는 동유럽, 동유럽보다는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 성과가 더 좋았던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초기 조건과 함께

개혁정책도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별 국가별로 보면 초기 조건이 의미하는 바에 비해 경제성과가 훨씬 좋았던 경우도 있고 나빴던 경우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앞절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2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대체로 동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개혁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4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대체로 구 소련 중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개혁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EBRD의 평가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의 체제전환 경험은 이러한 추측이 대체로 타당함을 보여 준다.³³⁾

〈그림 1〉을 보면 북한의 주성분 - 1 점수는 중국, 베트남, 동유럽과 큰 차이가 없으나 주성분 - 2 점수는 구 소련, 동유럽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이고 중국,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는 북한의 초기 조건이 사회주의적 왜곡, 지리적 위치, 국가역량을 종합한 측면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편이지만, 경제발전 수준 면에서는 대체로 중간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1/02년 북한의 경우 주성분 - 1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북한이 1990년대의 경제난 속에서 사회주의적 왜곡에 따른 대가('체제전환 비용')를 부분적으로는 이미 치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지리적 위치가 유리하다는 점도 주성분 - 1 점수가 낮게 나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반면 주성분 - 2 점수가 중국, 베트남보다 훨씬 높은 것은 왜곡된 산업구조 등 과거의 유산이 잔존해 있고 개혁 직전의 성장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주성분 - 2 점수가 체제전환국 전체 평균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온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북한의 초기 조건은 과거 구 소련 출신 국가

33) EBRD, 1999 *Transition Report*, pp. 22~39 참조.

들의 경우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동유럽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유리하지만 과거의 중국,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⁴⁾ 요컨대 초기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북한이 설령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해도 중국이나 베트남만큼 좋은 성장 실적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초기 조건이 개혁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 동안에 주성분 - 1의 점수가 하락한 점에서는 종전보다 개혁의 실행이 좀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주성분 - 2의 점수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개혁의 실행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특히 주성분 - 2의 점수가 개혁 속도와 (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추론은 발전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자유화 수준도 낮다고 보기 때문인데, 북한은 주성분 - 2의 점수가 나타내는 것보다도 정치적 자유화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과감한 경제개혁을 선택하여 실행할 만한 정치·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심각한 체제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별다른 개혁을 실천하지 못해

34) 이러한 결론은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한 정여천의 결론과 다소 다르다. 정여천,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 86~109쪽 참조. 정여천은 “전반적으로 북한은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초기 여건에서 평균적인 구 동구권 국가보다 더 많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108쪽)고 평가하고 있다. 정여천의 결론은 북한의 가격구조 왜곡이 동유럽보다 심각하고 시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구 동구권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전환의 긍정적인 요소는 정권의 안정성과 199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구조 왜곡이 해소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109쪽)고 말한다. 즉, 더 불리한 측면도 있고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더 불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초기 조건의 여러 측면을 훨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전반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여천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이 동유럽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 북한의 초기 조건이 동유럽과 비슷하거나 다소 유리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정여천의 연구에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왔다는 사실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경제개혁의 실행 여부에 대한 전망은 북한의 정치적·이념적 상황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4. 결론

거의 봉파라도 해도 좋을 만큼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 경제는 향후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기여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구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장과 관련한 객관적 조건들을 검토해 보았다.

과거에 중앙집권적 계획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던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지향적 개혁을 실행하게 될 경우, 개혁전략 또는 개혁정책만이 아니라 개혁 당시의 초기 조건도 개혁 이후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초기 조건은 개혁전략의 선택과 그 실행 가능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구 사회주의 경제 가운데서 개혁의 초기 조건은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유리했고 구 소련 출신 국가들이 가장 불리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그 중간이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9개의 초기 조건 지표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2개의 주성분으로 요약함으로써 구 소련,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의 개혁 당시 초기 조건을 1989/90년 시점 및 2001/02년 시점의 북한의 초기 조건과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 이외의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의 초기 조건은 대체로 구 소련 출신 국

가들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동유럽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더 유리하지만 중국 및 베트남보다는 훨씬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초기 조건은 지난 10여 년간 다소 유리해졌으나, 그 개선 정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기 조건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실행할 경우 구 소련 출신 국가들보다는 좋은 성과(더 높은 성장률)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북한의 경우 경제개혁의 초기 조건을 검토해 보려는 시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세계은행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론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체계적이긴 하지만, 역시 초기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초기 조건 가운데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인들(특히 정치적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은 계량분석의 한계는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에는 그나마의 지표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상황적 추론에 상당히 의존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은 유보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은 경제성장 및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에 입각한 논리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북한의 초기 조건을 검토해 보자는 문제제기로서 향후의 연구를 촉구하는 자극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노형진,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서울 : 형설출판사, 20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서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 이원기 · 이대원,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 비율 시산”(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8-10, 1998).
- 정여천,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조명철 · 홍익표, 『중국 · 베트남의 초기 개혁 · 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 방향』(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서울 : 통계청, 각년도판).
-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통일부, 2001. 12).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지표집』(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6).

- Andrew, Berg, Borensztein, Eduardo, Sahay, Ratna, and Zettelmeyer, Jeromin, “The Evolution of Output in Transition Economies : Explaining the Differences”, Working Paper, 99/73(IMF, 1999).
- Martha, De Melo, Denizer, Cevdet, Gelb, Alan, and Tenev, Stoyan, “Circumstance and Choice :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king Paper(World Bank, Oct. 1997).
- EBRD, *Transition Report 1997*(London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 Development, 1997).
- _____, *Transition Report 1999*(London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9).
- Elisabetta, Falcetti, Raiser, Martin, and Sanfey, Peter, "Defying the Odds :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Working Paper, No. 55(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0).
- Stanley Fischer, and Sahay, Ratna, "The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Working Paper 7664(NBER, 2000).
- Gary, Krueger, and Ciolko, Marek, "A Note on Initial Conditions and Liberalization during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No. 4(1998).
- Vladimir, Popo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17, No. 1(2000).
- Jeffrey D., Sachs, and Warner, Andrew M.,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5398(NBER, 1995).
- Moshe, Syrquin, and Chenery, Hollis B., "Patterns of Development, 1950 to 1983", Discussion Papers, No. 41(World Bank, 1989).
- UNDP,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undp-dprk.apdip.net>(UNDP, 1998).
- Jan, Winiecki, "Solving Foreign Trade Puzzles in Post-Communist Transition",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2, No. 3(2000).

〈Abstract〉

The Initial Condition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Comparative Studies

Seok Jin Kim (Senior Economist a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differences in post-reform economic performances across transition economies can be partly explained by their uneven initial condition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pre-transition economic distor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other former socialist countries, applying the methodology used in previous studies on the transition process. The initial conditions are summed up into two common factors, which are computed using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n the following set of variables : income per capita, urbanization ratio, indicator of industrial distortion, location, pre-reform growth rates, repressed inflation, trade dependence on the socialist bloc, state capacity, years under central planning. Three distinct clusters of countries emerge from this exercise, with China and Vietnam at one end (countries with most favorable conditions),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middl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at the other end (countries with most unfavorable

conditions). Th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are judged to be similar to or a little more favorable than those of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o have improved a little in the past decad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North Korea is likely to achieve better economic performance than th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if it undergoes reforms, but will have difficulty in achieving such rapid growth as China and Vietnam.

Key Words : Transition, Economic Reform, Economic Performance, Initial Conditions